

2nd National Assembly Youth Future Forum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이 이끌어가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2024.11.22.(금) 14:00~16: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YouTube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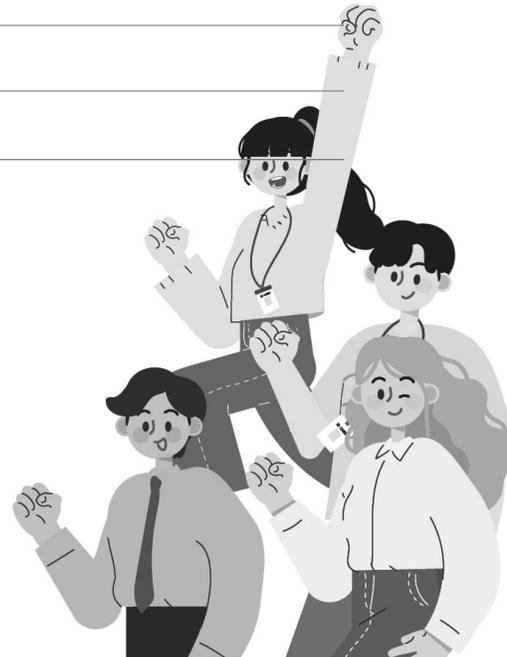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린다

Program

*사회: 이민영, 황다성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개회식 (14:00-14:20)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국회미래연구원
	축사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청년최고위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청년위원장)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제1부 (14:20-14:50)	기조발표 :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	정희욱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발표: 청년 정치참여 실태와 원인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중간 휴식 및 장내 정리 (10')		
제2부 (15:00-16:30)	토론: 청년 정치의 실태와 개선 방안	좌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패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광희 온담 대표(전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현지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청년과의 대화	토론 패널 및 청중 전원
폐회 (16:30)	포럼 정리 안내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Contents

개회사

국회미래연구원 1

축사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2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기조발표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

정희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7

주제발표 “청년 정치참여 실태와 원인”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21

토론 “청년 정치의 실태와 개선 방안”

<좌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패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35

이광희 온담 대표(전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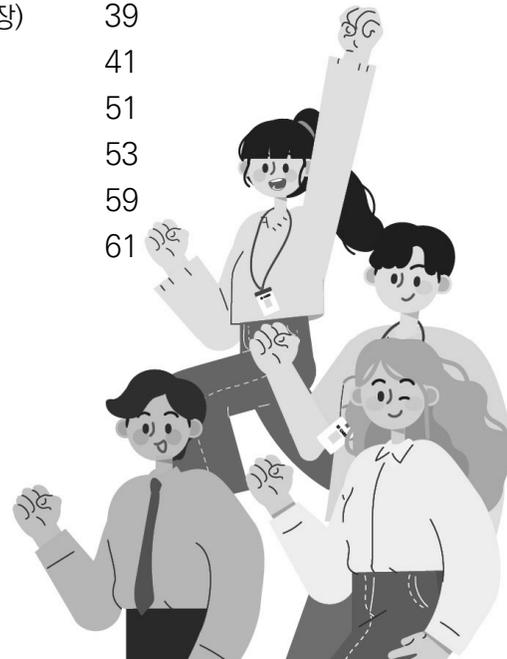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41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51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53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59

현지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61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 활동에도 축하 말씀 전해주신 진중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님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국회미래연구원의 청년미래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청년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인 청년문제에 대해 국회 구성원과 각계 전문가, 청년 세대 당사자가 함께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작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5%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OECD 최하위권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운동을 이끌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왔던 청년세대가 이제는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는 보다 더 조명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희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를 발제해 주시고,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님께서 “청년 정치 참여 실태”에 대해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청년 정치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청년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공유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청중께서 본 포럼에 쏟아주신 노력과 관심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진종오입니다.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청년미래포럼”은 우리 청년들의 삶 전반을 바꾸어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창의성, 그리고 진솔한 의견들은 청년정책들이 진정성 담긴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해야합니다. 청년이 정책대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경제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여, 청년들이 직접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상승효과를 이루어내도록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초당파적으로 청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진종오

모 경 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국회청년미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미래연구원에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청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세대는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결혼과 자녀 문제, 주거의 불안정 등 당장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청년의 정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의 미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국회청년미래포럼이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 경 종**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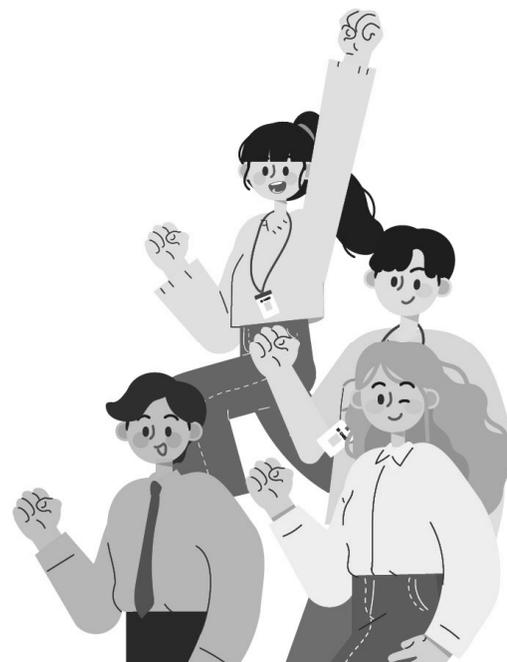
제1부

기조발표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

정 회 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 회 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왜 청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한가

1. 다양성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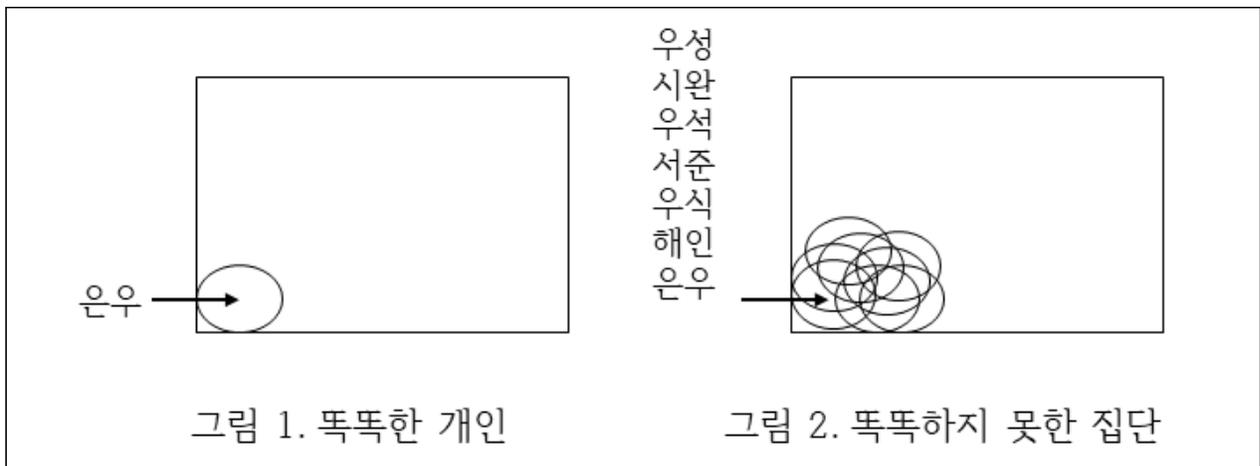
1)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CIA의 9.11 테러 예측 실패

- (1) CIA의 직원 대부분 백인, 남성, 중상류층, 개신교를 믿는 엘리트들임.
- (2) 조직 내 동질성과 동종선호는 관점의 사각지대를 가져와 빈라덴 과소평가

2)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 (1) 관점의 폭이 넓어져 사각지대 감소, 더 효율적인 일처리 가능함.
- (2) 포용적인 조직문화에서 혁신 가능성은 6배 증가, 생각의 다양성은 팀의 혁신을 20% 제고, 위험을 30% 감소시킴.

〈그림1〉 다양성이 부족할 때 생기는 일



*출처: 매슈 사이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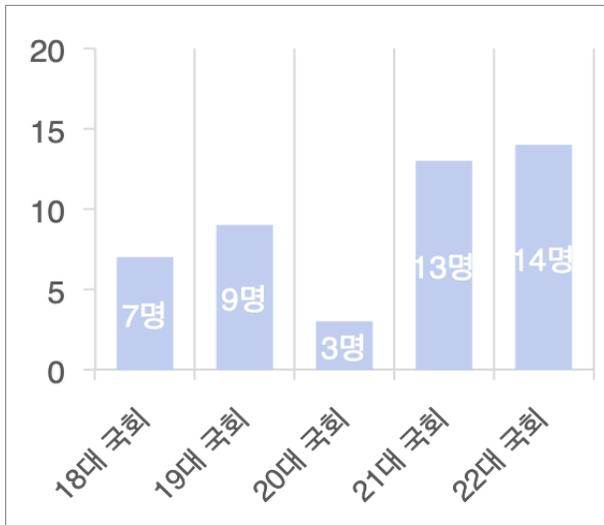
3) 다양성이 부족한 한국 정치

- (1) 동종선호 경향, “개인적으로 똑똑한 그룹이 집단적으로 멍청한 문제” 발생
- (2)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 남성 80%, 평균연령 56세,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출신. 여성,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비중 매우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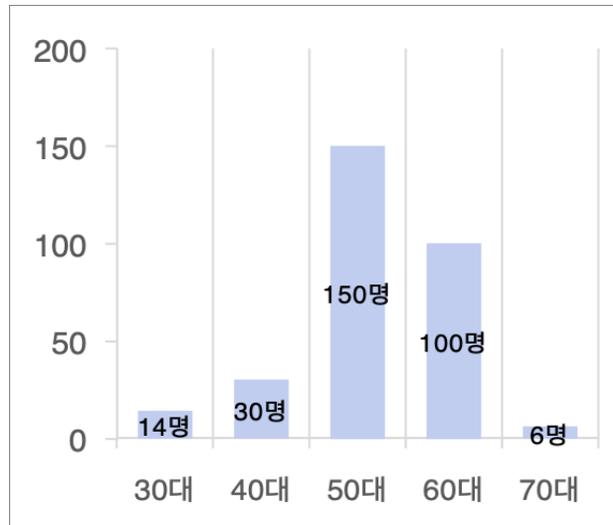
〈표1〉 연령에 따른 정치적 대표성 비교

연령대	유권자 비율(%)	국회의원 비율(%)
20-30대	28.6	4.7
40대	17.8	10
50대	19.7	50
60대 이상	31.9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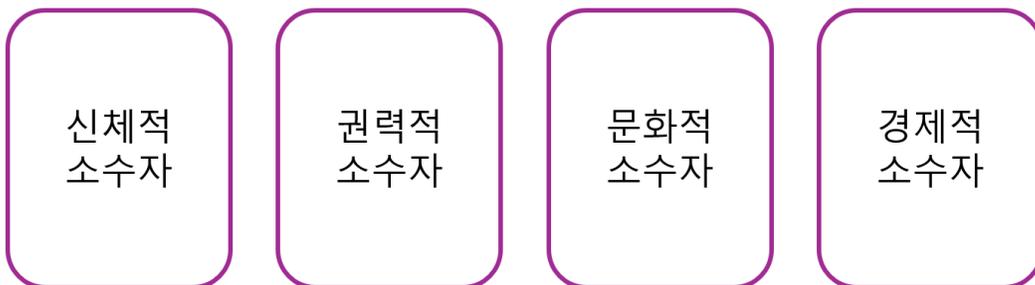
〈그림2〉 만40세 미만 국회의원 숫자



〈그림3〉 22대 국회의원 연령별 구분



2. 정치적 소수자로서 청년



1)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

- (1) “소수자란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의 관계에서 약자인 사람들이다. 소수

자 집단이 있다는 것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큰 특전을 가진 우세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8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평균연령 61.7세, 40대 미만 청년은 0명.

2) 국제적 수준에서도 정치적 소수자인 한국 청년

(1) 2018년 OECD 주요 회원국 중, 한국 청년의원 비율은 ‘30세 이하’ 0.0%(공동 106 등), ‘40세 이하’ 2.3%(143등), ‘45세 이하’ 5.6%로 세 연령대에서 모두 최하위 수준임. 2020년 기준 전세계 258개 의회 내 30세 이하 의원 비율 평균은 2.6%, 40세 이하는 17.5%임. 한국은 40세 미만 의원 비율이 약4%로,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국제의회연맹 『의회 내 청년정치참여: 2018』 보고서)

3. 연령차별(ageism) 받는 청년 집단

한국 청년은 사회문화적, 제도적으로 연령차별 받음

1) 사회문화적 차별: 청년 차별어의 존재(삼포 세대, 요즘 아이들, 요즘 것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어린것들, 젓비린내 난다, 구상유취, 조막만 한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너 사춘기냐?)

(예1)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4·10 총선 관련 MBC 100분 토론회 발언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닌가”

(예2) 민주당 현수막 문구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예3) 국민의힘 실업급여 금액 삭감을 추진 공청회 발언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됐다” “젊은이들이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에 다녀온다고 한다”

(예4) 유시민 특강에서 20대 성별 지지율 격차의 원인을 ‘군대·축구·게임으로 시간을 빼앗길 때 공부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질투’로 설명

“20대 남성은 축구와 게임에 빠져 있다”

(예5) SNL 등 미디어의 MZ 콘텐츠

“긱은일을 하기 싫어하고, 문해력이 부족하고, 특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세대”

“업무시간 직전 출근해 이어폰 꽂고 일하고, 점심때는 수저 세팅도 안 하는 애들”

(예6)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겨냥한 발언

“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냐”

(예7)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SNS에 올린 각종 발언이 문제되자 한 사과 기자회견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치기어린 20대 시절”



2) 제도적 차별: 장유유서 사회에서의 노인 정치(gerontocracy)

(1) 동일득표 시 연장자 우선 규정. 국회의원, 자치단체의원, 지자체장(「공직선거법」 제 188조, 190조, 191조)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제시. 청년의 정치참여가 절실한 상황 고려할 때 차별적이며 불합리함.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본, 캐나다는 동일 득표 시 추첨 혹은 보궐선거로 당선자 결정.

(2)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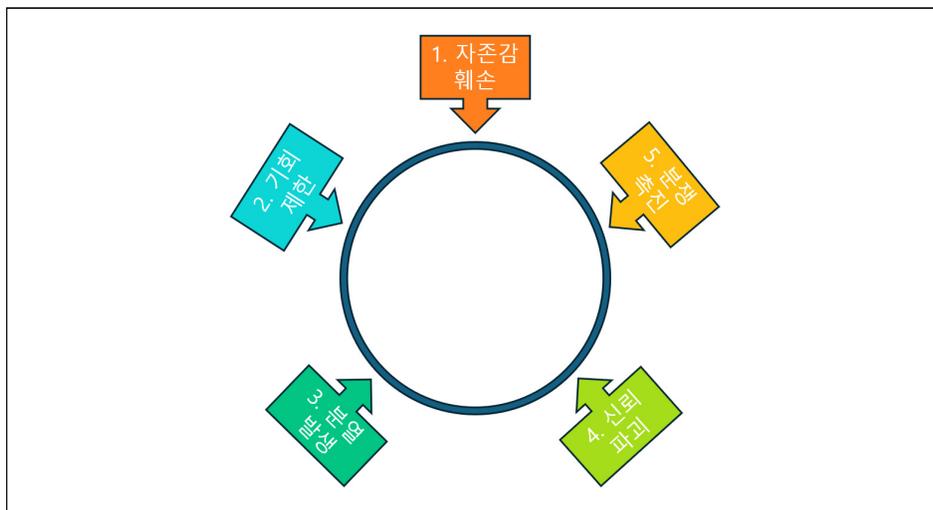
〈표2〉 국가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국가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
프랑스, 핀란드	18세 이상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30세 이상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35세 이상
독일, 이라크, 체코, 필리핀	40세 이상
이탈리아	50세 이상

〈표3〉 우리나라 선거 종류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선거권 나이	피선거권 나이
선거 종류	대통령선거	18세	40세
	국회의원선거	18세	18세
	지방선거교육감 선거	18세	18세

〈그림4〉 차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II. 무엇을 청년 정치참여라 하는가

1. 청년 정치참여의 다양한 형태



*출처: Milbrath(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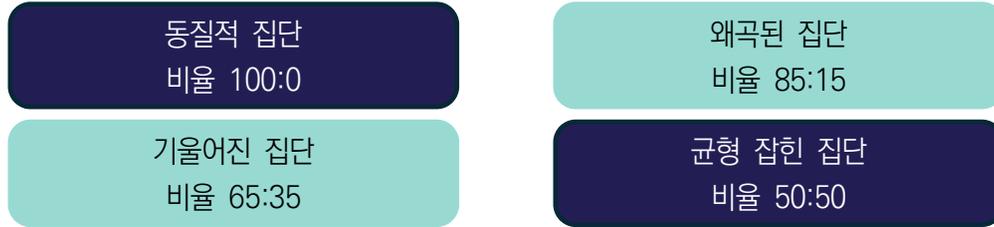
- 1) 선거캠페인·시민단체 등 자원봉사, 청년정치 관련 단체 가입 및 후원, 정당원 가입, 투표, 의식 있는 디지털 시티즌 활동, 경청하고, 배우고, 함부로 가정하지 말기,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참여
- 2)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참여: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크레파스 ‘살색’에서 ‘살구색’ 명칭 변경. 중1, 초등 5학년 학생들이 2004년 8월 인권위에 진정 제기함. 2009년 고교 3학년이 된 청소년들이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 속옷업체, 할인점 등이 여전히 기사나 상품 광고에서 ‘살색’ 표현 사용하고 있다고 인권위 진정.

2. 명목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 1)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두 대표성 모두 중요함. 우선 청년 정치인의 ‘숫자’, 즉, 명목적 대표성이 늘어나는 것 중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다면 결국 청년은 정치에 대한 신뢰와 정치 효능감을 잃고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으로 전락. “거울 대표성(mirror representation)”이 필요하나, 한국정치는 토큰니즘 정치임.
- 2) 토큰니즘(tokenism): 단지 그 집단 내의 다양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외된 사회의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관행. “tokenism is diversity without inclusion”(포용성 없는 다양성)

(1) 인구 구성 비율은 소수자들의 조직 내 활동에 큰 영향 끼침

〈그림5〉 네 종류의 집단



〈표4〉 극단적인 비례적 희소성의 결과(Kanter's tokenism)

가시성 (visibility)	소수자들은 눈에 띄고 많은 관심 받음
대조 (contrast)	두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 더 잘 인식, 공통점 유지 위해 소수자들을 바깥쪽 배치, 경계 만듦
동화 (assimilation)	소수집단과 관련된 특성 왜곡, 다수집단의 공유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맞춤. 소수집단은 다수집단이 부여한 일반화 모방, 동화, 즉석 정체성 형성.

(3) 청년의원의 숫자(명목적 대표성) 증가는 청년 법안(실질적 대표성)의 증가로 연결. 제21대 국회 청년법안 총275건 발의, 분석 결과 청년의원일수록 청년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많아짐.

〈표 5〉 21대 국회 청년의원의 청년법안 발의 수

의원명	정당명	대표·공동 발의 건수		의원명	정당명	대표·공동 발의 건수	
		대표	공동			대표	공동
류호정	정의당	대표	3건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	0건
		공동	11건			공동	3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7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	29건
		공동	28건			공동	26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1건
		공동	7건			공동	21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	0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표	1건
		공동	56건			공동	26건
장혜영	정의당	대표	0건	지성호	국민의힘	대표	0건
		공동	8건			공동	9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표	0건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	1건
		공동	7건			공동	24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표	0건
						공동	0건

*출처: 양희정·정희옥(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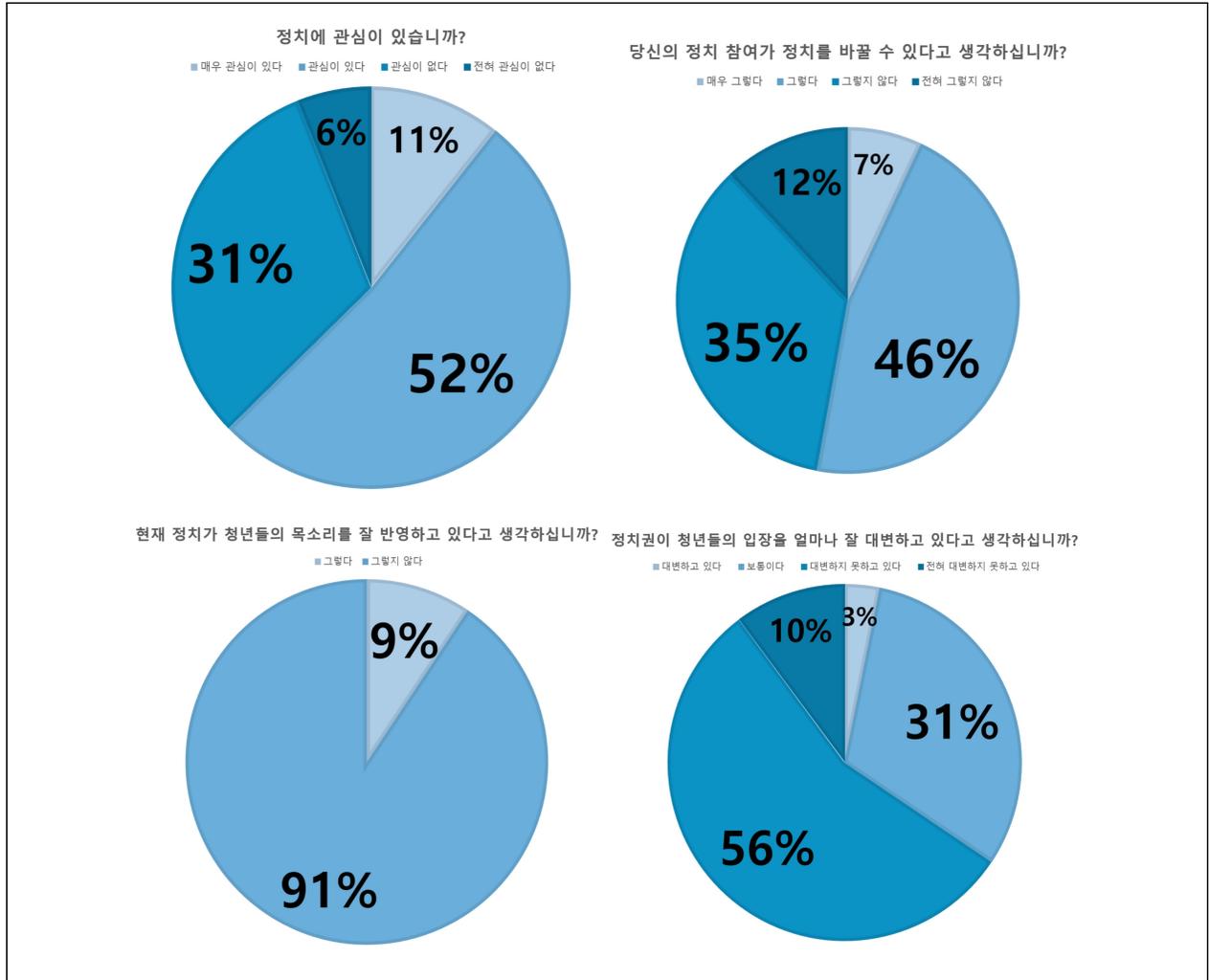
〈표 6〉 청년의원이 발의한 청년법안

	의안명	대표 발의자	청년의원 공동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경태	無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 포함.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류호정, 오영환	청년 창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반영.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경태	김남국, 오영환	「군인연금법」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의 전역 후 생활지원.
4	생애 최초 국민연금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법안	장경태	김남국, 오영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 1개월분 지원.
5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	김남국, 류호정, 오영환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발전적인 방향 제시 및 국민통합 기여.
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오영환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예지	無	청년 장애인근로자 사고 재발 않도록 장애인근로자 실효성 있게 보호.
8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경태	김남국, 오영환, 장철민, 전용기	정당이 여성 및 청년정치인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장경태	無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 추가.
10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류호정	장경태, 장혜영	채용비리 개념 정의, 처벌 및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 규정.
11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	류호정, 오영환	청년 창업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
12	청년세 법안	장경태	김남국, 오영환	청년사업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13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장경태	김남국, 오영환	청년에게 신용보증서 제공, 금융회사 대출 가능케 하고 신용질서 확립.
14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장경태	김남국, 전용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

*출처: 양희정·정희옥(2022)

Ⅲ. 청년 정치참여의 현황은 어떠한가

1. 탈정치화되지 않은 청년 집단. 정치 관심 높음(약63%), 정치효능감 약간 높음(약53%), 정치 불만족 매우 높음(약91%), 투표율은 높지 않은 편(약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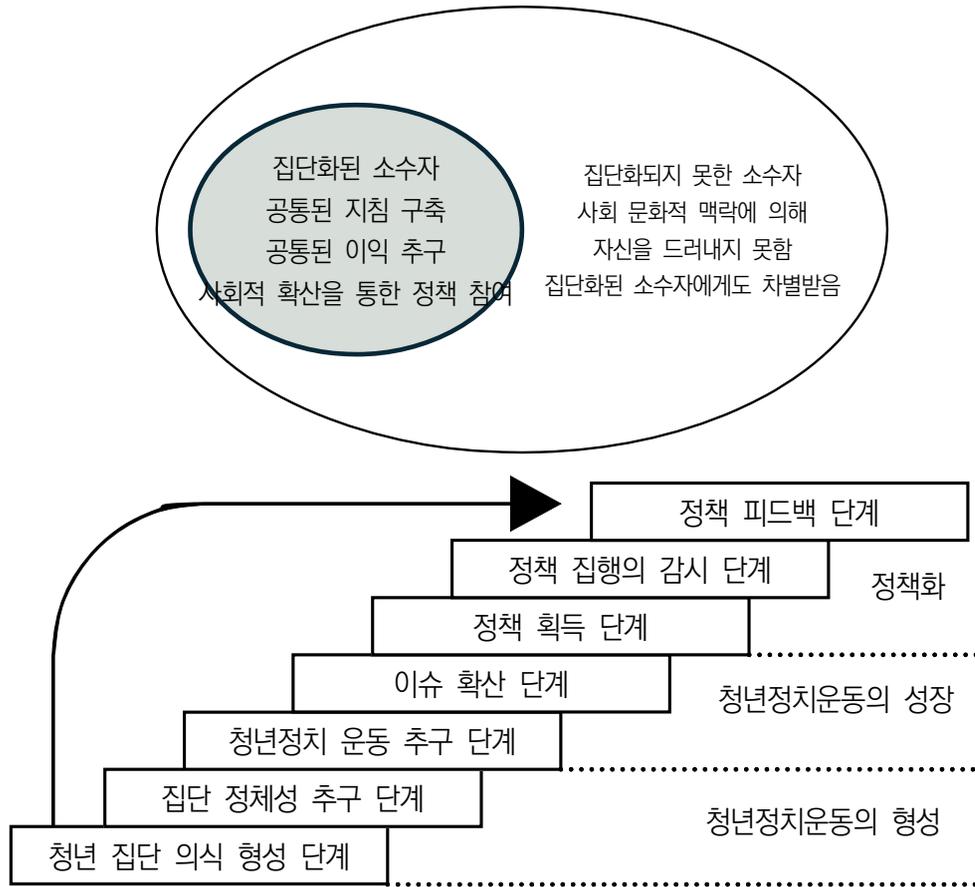
*출처: 서울권대학논문연합회 청년정치 공동취재단 설문조사/김현아의원실 연구용역보고서(2029)

〈표7〉 역대 국회의원 선거 청년 투표참여율

구분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24 제22대 총선	56.8	57.7	52.4	56.1	62.6	71.6	82.0	84.7	60.5
'20 제21대 총선	67.4	68.0	58.7	57.1	63.5	71.2	80.0	78.5	51.0
'16 제20대 총선	-	53.6	52.7	50.5	54.3	60.8	71.7	73.3	48.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 집단화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청년 집단



*출처: 전영평 외(2011)에서 재구성

〈표8〉 시도별 청년단체 수

시도별	청년 단체 수
서울특별시	187
부산광역시	60
대구광역시	30
인천광역시	20
광주광역시	33
대전광역시	35
울산광역시	12
세종특별시	9
경기도	113
강원도	25
충청북도	21
충청남도	35
전라북도	43
전라남도	58
경상북도	78
경상남도	42
제주특별자치도	23
합계	824

출처: 양희정·정희옥(2024)

〈표9〉 청년의 집단화 정도

구분	조직화 여부		
	집단화	비집단화	
소수자 특징	신체적 소수자	유형 1 (장애인)	유형 2 (HIV/AIDS 감염인, 한센인)
	권력자 소수자	유형 3 (북한이탈주민)	유형 4 (청년?)
	경제적 소수자	유형 5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유형 6 (노숙자)
	문화적 소수자	유형 7 (성소수자)	유형 8 (이주배우자)

출처: 전영평 외(2011)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10〉 청년 정책 영역

		소수자옹호집단 형성정도	
강	약	강	약
소수자 반대이집단 형성정도	강	I. 정책갈등 영역: policy conflict <이익집단정치 발생> • 비정규직 • 외국인노동자	IV. 정책기회 영역: policy opportunity <대중정치 기대> • 양심적병역거부자 • 동성애자
	약	II. 정책과잉 영역: policy excess <고객정치 발생> • 장애인 • 탈북자 • 일본군위안부 • 결혼이주여성	III. 정책소외 영역: policy absence <창도가정치 기대> • 납북자가족 • 난치병환자 • 노숙자

*출처: 전영평 외(2011)

3. 정부의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은 빈약.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간주,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파악, 해소하는데 집중. 시혜적이며 사회복지정책의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보장’이 아니라 ‘보호’의 차원임.

- 1) 청년기본법의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없음. 청년기본법 제4장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 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 2) 청년정치 스쿨, 청년정치 캠퍼스Q, 청년정치학교, 청년정치 아카데미, 청년정치 포럼, 진보정치 4.0 등 각 정당별로 청년 정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부분 정치 교육보다는 당론 및 특정 정당의 사상에 대한 지식 전달형 교육 중심, 출마자를 위한 교육 부족함. 또한 기존 청년 정치 교육의 경우 모든 수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 비수도권 청년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3) 각 정당별 청년위원회는 정당의 당헌당규 속에서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및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됨. 청년 당원들이 의사결정구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 시기별로 바뀌는 당협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청년위원장이 결정되고, 중앙당의 경우 당대표 중심의 중앙청년위원회 조직 구성.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당협(지역), 시·도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의결권, 사업권, 예산편성권 등을 가지는 당내당 형식의 청년당 구성 필요.
- 4)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심의기구와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자체장의 사조직화, 특정 정당 및 단체의 독점, 사업 및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한 참여 등으로 실패 사례 다수 발생함.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 및 예산 차이가 극명하여 지역별 불균형 심화되고, 전반적으로 지역 청년 정치 활성화 부족.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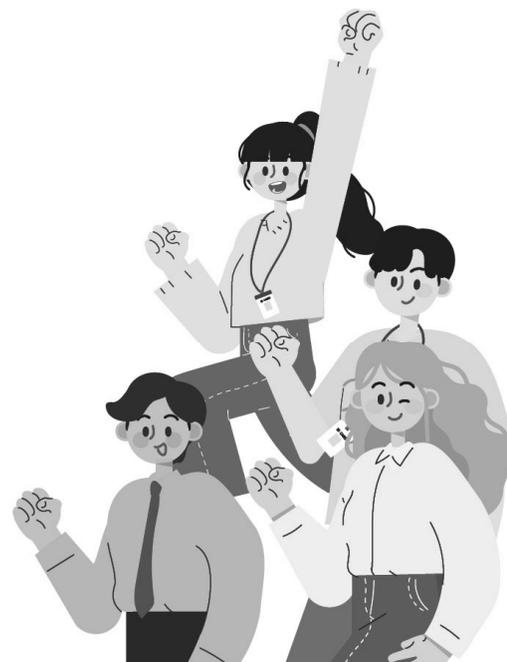
제1부

주제발표

청년 정치참여 실태와 원인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김 윤 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Status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청년 정치 참여 실태

청년 정치 참여란 무엇인가?

“청년을 기반한 정치나 일체의 사회 운동”

정치 참여엔 기본적으로 투표권 행사 뿐 아니라 서명, 청원, 집회 등 다양한 양상이 있으나, 실태를 더 명확히 살피기 위해 아래 2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정치의 청년 대표성



청년대표성은 청년 의원의 비율이나 정도로써, 국회에서 청년 세대가 얼마나 대표되는지를 의미함

청년 투표권 행사



국회의원 총선부터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체의 정치 참여 활동

출처 : 이신행, 서찬석. 「누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세대와 교육 수준에 따른 정치 참여 양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5권 3호, (2024.8)

정치의 청년 대표성 실태

22대 국회 20대 국회의원 수 '0'명, 역대 최고령 국회

제 22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

56.3세

지난 국회에 비해
1.4세 연령 증가

총선 유권자 중
청년 유권자 비율

3명 중 1명

유권자 대비 청년대표성
OECD 국가 중 최하위

제 22대 국회의원
청년 정치인 비중

4.3%

20대 국회부터
1~4% 선회

출처: 김민수, "국회는 더 나이 들고, 청년 정책은 덜 나왔다", 충대신문, 2024.06.

청년의 투표권 행사

22대 총선 투표율, 70대가 1위... 20대 꼴찌

22대 총선 투표율 연령별 현황



70대 84.7%로 가장 높은 수준,
20대 52.4%로 가장 낮은 수준

70대는 6%가 상승한 반면,
20대 투표율은 6%가량 하락

21대 총선 대비 50대 이상 투표율은 올랐으나,
40대 이하는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낮아진 청년의 투표율

출처: 김경호, "22대 총선 투표율, 70대 '1위'...20대 '꼴찌'", 세계일보, 2024.09.

Causes of inadequate youth representation

청년 대표성 상실 원인

청년 대표성 상실의 원인 I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다수대표제

: 한국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면 국회의원에 득표율 상관없이 당선되는 구조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비례대표제

22대 총선 비례대표 통계



전체 의원 중 비례대표의원이 15%가량에 불과한 실정

- 다수대표제는 조직이나 정치자금 동원 능력, 인지도 등 선거 경쟁력이 강조되어 청년들이 다수 대표제로 의회를 진출하는 데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 반면 비례대표제는 성 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대중 대표성을 고려해 청년 비율을 증대할 수 있다

출처 : 김만흠,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2.

청년 대표성 상실의 원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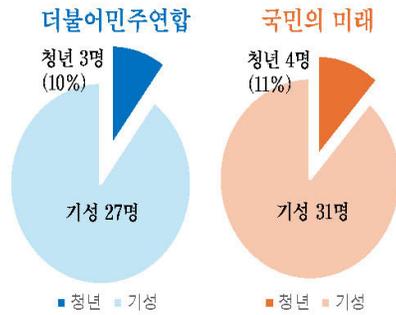
비례대표 확대, 청년 정치인 양성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실제로 2030 국회의원 비율 최상위권을 기록한 덴마크, 스웨덴 등은 비례대표제를 적절히 활용한다.
 IPU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국가들의 2030 의원 비율 평균은 약 30%로 소선거구제 국가들의
 평균 비율인 약 2%를 월등히 앞섰다.

비례대표제에서도 소외되는 청년 정치인

22대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등록 청년 비율

기타
 조국혁신당 : 청년 2명 (8%)
 개혁신당 : 청년 3명 (30%)
 새로운 미래 : 청년 2명 (18%)



더불어민주연합 : 30명 후보 중 청년은 3명
 국민의미래 : 35명 후보 중 청년은 4명
 조국혁신당 : 25명 후보 중 청년은 2명,
 개혁신당 : 10명 후보 중 청년은 3명,
 새로운미래 : 11명 중 청년은 2명

**비례대표 후보에 청년을 일정 수 할당하지만,
 청년 후보자의 실질적 당선에 기여하기 보단
 보여주기식 행위로 끝나고 있다**
 - 우리 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정다민 교수

청년 대표성 상실의 원인 II

지나치게 높은 정치 진입장벽, 정치자금의 부족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300만원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비용
1500만원

현 국회의원 후보자
 평균 재산 수준
28억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억 5천만원 ~ 2억원 소요
 원외 정치인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없는 현실,
 22대 총선 국회의원 평균 재산도 33억 3000만원으로 집계되는 작금,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이 과연 진입가능한 걸까?

출처 : 중앙선거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이혜운, “현역에 유리한 ‘증자독식’ 정치자금법”, 시사IN, 2024.4..

청년 대표성 상실의 원인Ⅱ

지나치게 높은 정치 진입장벽, 정치자금의 부족

당내 청년 당직자는 열정페이

정당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이 청년 정치 발전비로 책정되지만, 당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당 내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여유 없으면 엄두도 못 내는 현실, 당의 예산은 오롯이 청년위 활동비로 쓰고, 생계에 필요한 비용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심각한 정치의 기회비용

아무리 당내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컸다 하여도 공천은 확답 받을 수 없기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당내 청년들

다른 청년이 취업 경력을 쌓을 때, 사회 첫 걸음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취업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청년 정치인이 되려면 인생을 걸어야 한다

무급 열정페이로 삶을 걸어야 하는 “청년 정치인”

출처: 이동수, “유능한 청년이 정치 꺼리는 이유... ‘여의도 2시 청년’을 보라”, 소셜코리아, 2024.02.

청년 대표성 상실의 원인Ⅲ

청년 정치인은 상징적, 표심 위한 이벤트성

"각 정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얼굴마담으로 세우는 것이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에서 제한된 역할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준석 현 개혁신당 국회의원, 2017년 시사위크 인터뷰 중

당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부당함을 많이 느끼죠. ‘내가 꿈을 갖고 있어도 안 되겠구나’라는 실망 때문에 떠나는 청년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게 청년 인재를 키우는 데 장애물입니다

전용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년 2월 뉴스타파 인터뷰 중

선거철마다 영입되지만,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 당선권 순위 배정은 드문 청년 정치인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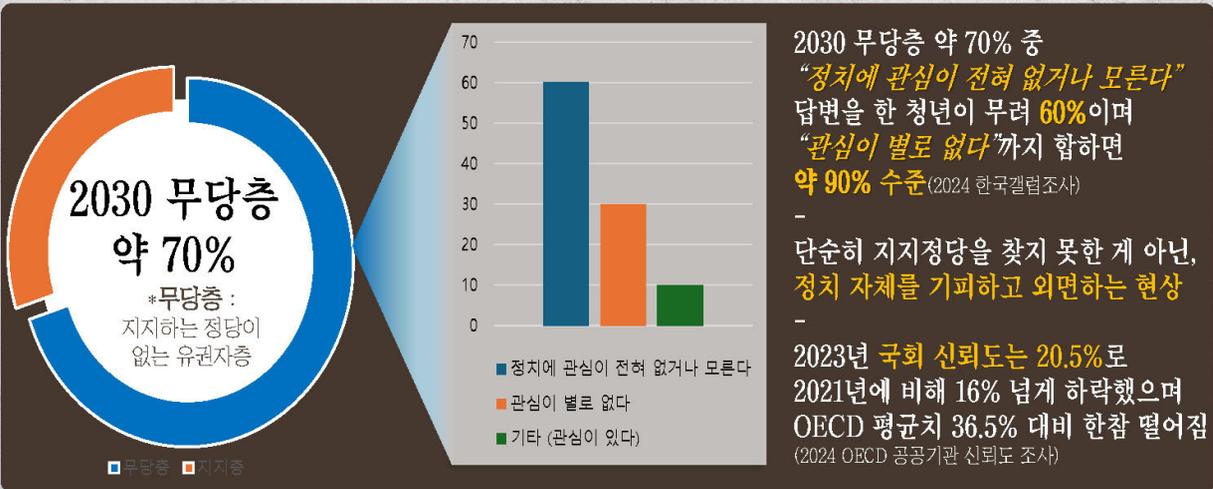
Causes of low youth voter turnout

저조한 청년 투표율의 원인

청년 투표율 저조 원인 I

낮은 정치 효능감

: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이 정치에 참여해 실제로 자신의 의견이 이에 반영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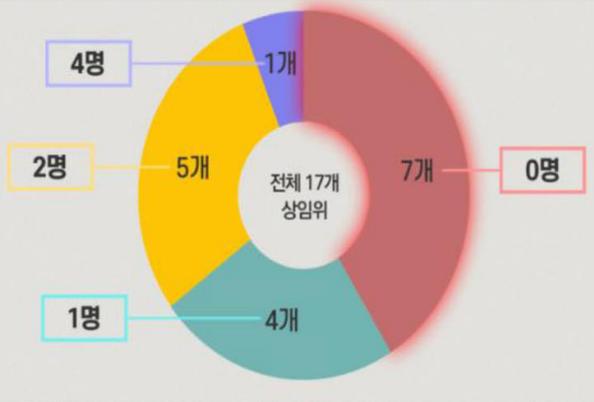
출처 : 황해동, “정치요? 관심없어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청년세대의 일갈”, 대전일보, 2024.10.

청년 투표를 저조 원인 II

청년 정책 반영의 미흡함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2030대 의원 비중

상임위원 명단은 2024년 1월 기준, 나이는 당선 시점 기준



2024년 1월 기준 전체 17개 상임위 중 2030 의원이 없는 곳이 7개나 되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에서 청년 의원의 목소리는 작고, 중장년 입김은 지배적이다

결국 21대 국회 대다수 상임위에서 청년 법안은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청년 키워드 법안'의 가결률은 2.45%로, 전체 가결률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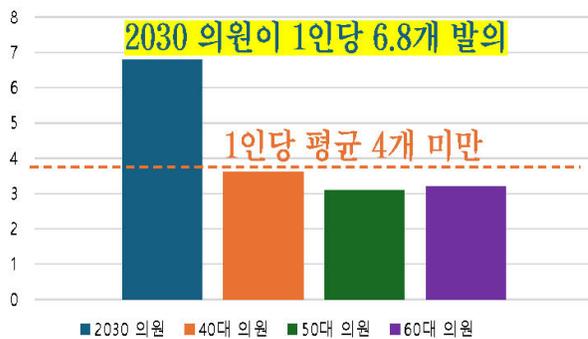
*청년 키워드 : 창업·신혼·결혼·육아·대학생

출처 : 홍주환, "세대 다양성 국회 @'젊은 국회'를 상상하다", 뉴스타파, 2024.02.

청년 투표를 저조 원인 II

결국 청년 대표성 확보해야 청년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

청년 키워드 법안 980개 연령별 의원 1인당 발의 건수



40대~60대 의원이 한 명 늘어나면 청년 키워드 법안은 3개 정도 발의되나, 2030 의원은 한 명 늘어나면 청년 키워드 법안이 6개~7개 더 발의
결국 2030 의원이 늘고, 청년 대표성이 향상되어야만 청년 법안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2030 의원이 늘어나야 종국엔 문제가 되었던 절반에 달했던 청년 법안 가결률도 증가될 것

출처 : 홍주환, "세대 다양성 국회 @'젊은 국회'를 상상하다", 뉴스타파, 2024.02.

Efforts and limitations to exp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한계

피선거권 연령 하향, 대통령은?

기존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이어야 한다

2021.12.28 개정된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한다

기존에 25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던 피선거권 연령이
평균 수준으로 내려가며 청년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2021년 진행됨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 ✓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 하향**
- ✓ 청년 **공천·자금** 등의 현실성 문제

청년할당제, 선거 때만 소비된다

청년할당제 관련 법안

정당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내용	당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부여 및 청년·여성 공천을 위한 정치환경 조성 노력	비례대표 후보자 20% 청년 추천 및 지역구 후보자 중 20% 이상의 청년 추천 노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여성·청년 각 1명 이상을 공천

인요한 전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
지난해 11월 지도부에 제안

- 1)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 2) 비례대표 당선권 내 청년 50% 할당

현실화 실패

청년할당제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괄호 안은 비율



장경태 민주당 의원 (전 전국청년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1) 비례대표 후보자 중 20% 이상 청년 추천
- 2) 지역구 후보자 20% 이상 청년 추천 노력

2022년 7월 이후 논의 중단

출처: 종선리포트 특별기획팀, "선거 때만 2030 앞세워 '일회용 혁신'... 안 지켜도 그만 '청년할당제'", 서울신문, 2024.03.

Significance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청년 정치 참여 의의

청년의 의견 없는, 청년이 당면해야 할 과제들

저출산 인구절벽 고용불안 기후 식량 환경

과연 청년대표성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지금,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논제에 대해
청년 없이 논의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민주주의의 척도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고를 위해 청년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1.
지금까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성과, 그리고 한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치인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가

3,
청년 정치 무관심과 청년대표성 결여,
그 인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제2부

토론

청년 정치의 실태와 개선방안

〈좌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패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광희 온담 대표(전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현지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박 지 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뒤에 누가 있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82일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다. 26살이 대표직에 있으니 내가 하는 모든 발언에는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따라왔다. ‘젊은 사람은 정치를 할 줄 모른다거나,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의도 문법이었다. N번 방을 밝히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던 내가 감춰왔던 신분을 밝히고 정치권에 받을 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정치를 통해 내가 원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였다.

기성 정치인들도 정치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나의 기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치라는 어려운 일을 기꺼이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짧은 시간 내가 겪은 정치인들 대부분이 시민을 지키는 일보다 본인이 당선과 재선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그 속에서 청년의 역할은 기성 정치인의 줄에 잘 서는 것, 행사장에 동원되고 미리 가서 의자를 열심히 옮기는 것, ‘너는 예쁘니 율동을 하라’는 칭찬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대선을 고작 한 달 앞두고 대선캠프에 들어온 나의 눈에 정치를 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의지도, 열의도 가득해보였다. 분명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똑심 있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했다. 갈등을 만들기 싫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괜히 밋보였다가 정치를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그건 어찌면 학습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목소리를 냈다가 파내진 선배 청년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인어공주도 아니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청년 정치인이 ‘진짜’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더 길고 고단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만난 한 청년은 내게 묻기도 했다. “선거에서 공천 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관리 문제로 평가 되는데 그 기준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가

요?” 수십 년간 한 지역에 살면서 인맥을 쌓아 온 중견 정치인과 정치를 막 시작하는 청년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 보겠다고 나서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다 큰 청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침묵을 강요하려 들거나, ‘너는 젊으니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한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부르짖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청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 정치는 여전히 청년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존재하고, 이에 기반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깨고 성찰해야 하는 당사자는 중장년 남성 정치인이지만,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 남성정치의 문제는 숨겨지고 청년과 여성 정치인의 능력과 자질만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장년 남성정치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직접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서 여성과 청년이 작은 파이를 두고 대결하게 되는 구도가 계속 빚어지는 상황도 목격했다. 민주당의 소위 ‘텃밭’에서는 기존에 하던 남성들이 계속 직을 이어가거나, 설령 아니더라도 중장년, 비장애, 이성애, 고학력, 고소득인 남성들에게 지역을 ‘물려’준다. 하지만 당선이 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여성이나 청년을 공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공천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 여성과 청년은 대립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특권계층인 소수의 남성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청년 할당제를 비판하며 폐지를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민주당 당헌에서 청년 할당제는 권고 조항이지, 의무조항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폐지할 것은 할당제가 아니라 기득권 중장년 남성정치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동안 정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집단들의 연대가 중요하고 절실하다. 할당제는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기득권 남성 집단이 과도하게 독점했던 권력을, 원래 권력을 가져야 했던 다른 집단들에게 골고루 되돌려주는 것이다.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인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다.

청년정치가 왜 필요하냐는 사람도 있다. 청년정치는 청년세대를 위한 ‘당사자 정치’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낡은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의제를 다루는 정치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다. 기후위기, 차별과 불평등, 지역불균형, 이주민과 난민, 통일과 평화, 디지털 기술과 AI, 동물복지를 포함해 이러한 의제들은 청년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딥페이크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청년 국회의원이 회의석상에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더라면 가해자 면피 조항으로 지목된 '알면서' 논란¹⁾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피해 영상물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 방안이나, 가상 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자 해도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년의 도전을 수용할 마인드가 없고 지켜야할 기득권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내게도 그랬던 것처럼 기성정치인들은 필요할 때만 청년을 불러다 쓰고 쉽게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 넓은 정치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청년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들에도 청년위원회가 있어 재정적 독립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지만, 정치적인 독립성은 갖추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년 조직이 '정당 내 야당' 역할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 청년 조직도 뿌리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인재를 훈련시키는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의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청년의 정치적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일이 많아야 청년들도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숙의 과정을 갖추어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정책화하도록 청년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협력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당의 정치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정당의 청년과 기성 정치인의 토론의 기회는 흔치 않다. 선거철에 청년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 한 장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기성 정치인의 노련한 경험과 청년 정치인의 새로운 시각이 만나 더 나은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지향할 미래다. 그러려면 결국 국회에 더 많은 청년이 들어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청년정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의 청년 정치가 더 활발히 살아 꿈틀거렸으면 좋겠다.

1) 법안 속 '알면서' 문구... "가해자 면피 조항" 논란 끝에 삭제

[소셜픽]/JTBC/정재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16526>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보면 '정치 활동을 하려면 사실상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와 정치를 병행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정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다. 100년이 지났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상황이다. 다양한 경험,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금수저, 변호사가 아니어도 정치 활동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다.

나 역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청년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정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이 청년정치인을 키우는데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당은 청년을 줄 세우는 것보다 청년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청년들의 지지 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안정적인 지지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 기존질서에 따르지 않는다고 내쫓는 식으로는 변할 수 없다. 청년이 정치에 뛰어드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욕먹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하고, 싸울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른과 싸우는 것이 어찌 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욕먹을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아이 대 어른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은 정치인이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늘 따르는 비판이 있다. '너는 정치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가 된 정치인은 그 누구도 없다. 무엇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건 겸손한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이다. 청년이 기성세대와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힘과 도전하는 용기다. 모든 도전은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순변을 기다릴 것인가, 들이받을 것인가? 실패를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청년들의 정치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광 희 온담 대표 (전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청년 정치인의 양성과 청년 정치 참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선출직 정치인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제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토론편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선출직 (고위급) 정치인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에는 반대합니다. 정치인은 단순히 선출직뿐만 아니라 위촉직, 임명직, 정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정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2030 자문단 등을 통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을 고위공직자 또는 당직자로 등용,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청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청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치'입니다. 정치란 개인과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와 국제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정치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인 시기에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며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위 공직자, 당직자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을 청년 정치의 부재에서 찾기보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제한 없는 연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각 정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초선 의원이 제한 없이 연임을 이어가는 구조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들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년을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임명권자의 굳건한 결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국민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한 정책제안 공모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회, 자문단, 명예 보좌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도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 출마자에게는 기탁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 융자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고위직 공직자나 고위 당직자의 수로 판단하기 이전에,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 청년들은 자신들의 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청년 투표율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 세 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청년정책센터장

두 개의 발제문을 받았다. 청년정치의 현실태에 대한 정리와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 약한 이런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 두분 연구자에게 먼저 박수를 보낸다. 이 발표 내용들은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본다. 나 또한 청년정치를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몇 년이 지나도록 변화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이 좀 강했으면 하는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다라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생각을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토론자 입장에서 주장을 세계 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너무 부족해 지금 쓰고 있는 청년정치 책의 서문과 본문 일부(당헌 당규 부분)를 상당 부분 소개했다. 널리 양해를 바란다.

1. 토론문

현재의 청년들은 내가 대학생으로 경험했던 1980년대 청년들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의 아이들이고 신자유주의의 아들 딸들이다. 동시에 지금 2030 청년들은 세월호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박근혜 탄핵 촛불의 세례를 받은 촛불세대다. 학교에서부터 시작한 무한경쟁과 실력주의는 이제 청년의 투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청년들 가운데 일베가 판을 치고 페미니즘을 공격하고 보수정당 후보의 당선에 힘을 보탤다. 정당과 무관하게 일부 정치를 한다는 청년들은 조금 활동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경쟁을 한다. 지방의회에 도전하라! 지역으로 가서 피땀을 흘려라는 내 얘기는 과연 누가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존의 관성적 제도나 정책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공부해나가라는 얘기는 그다지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13년 동안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잡아온 청년정치 1.0이 실패했다고, 청년정치 2.0도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다시 도전하려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 진단과 대안이 분명해야 한다.

상황은 조금씩 달라도 청년정치가 실패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간단하다. 젊은 의원 몇 명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는 참신한 가능성이라는 청년정치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어느 당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이 새로운 아젠다를 세우는 커녕 기존 기득권 정치처럼 눈치보는 정치를 배웠다. 어찌 비례대표 당선 가능 순위에 들어갈까, 어찌 유력한 우세지역에서 공천받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노무현을 닮은 천아람의 순천 도전 같은 사례가 어디 더 있는가? 결국 천아람도 비례대표를 선택했다. 당은 당대로 고생해온 당내 청년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외부 청년을 선호한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 청년정치인들의 고집과 막말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평범한 시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는 왜 또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을까?

이 실패의 책임 7할은 기성정치에 있다. 그러나 나는 청년 정치인 자신도 3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청년정치란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다. 새 시대 정신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치를 말한다. 좌파 일각에선 노동자 계급정치도 못하면서 무슨 청년정치냐고 한다. 우파에선 자다가 굴러 떨어진 떡 취급하던 청년 특히 이대남의 지지를 반가워하다가 다시 이탈하니 이런 현상이 이해가 안된다.

나는 줄곧 '정치를 하려는 청년은 지역으로 가라. 총선 비례대표라는 로또 바라지 말고 기초의회에서 시작해라'고 주장해왔다. 지역으로 가서 갈고 닦아라. 정치인은 공복이 되어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 공부하고 희생하는 존재이다. 그 자세와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지역이고 지방의회이다. 그러자면 현장으로 지역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지방의원이 되어서 훈련받고 기본자세도 배우고 예산과 조례의 힘과 의미도 배우고 여론이 무엇인지 민심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라. 몇몇한 방식으로 당장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며 성장해라. SNS야 기본적인 것이지만 청년세대는 왜 온라인 상에만 관성적으로 머물러 활동하고 있나? 모바일을 넘어서 현실의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이다. 뭉쳐라. 조직해라. 오프라인에서 활동해라. 부대변인 말고 공중파TV나 CA TV에 패널로 출연해 인지도 높이는 게 다가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공부하고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선거에 출마해라. 직접 출마가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후보를 도와 당선시켜라. 그리고 함께 꿈을 실현해라. 꿈을 가지고 목소리를 모아라. 돈을 벌던지, 공부하고 자기 관리해라. 음주운전하지 말고 담배 끊고 술 적당히 마셔라. 정치가 왜 엉망이나 하면 자꾸 반칙하는 자들 때문에 타락했다.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기회주의자 기득권 정치인들이 정의와 도덕이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타락의 역사와 정의가 뭘지 배우질 못했다. 개인의 출세나 도덕과 구별되는 정의의 실현과 공공의 가치를 배운 적이 없다.

OECD 국가 가운데 지금도 유일하게 한국만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한다. 민주주의를 하자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안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윤석열 정부만 욱할 일인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되었고 다수 의석과 진보 교육감들도 있었던 문재인 정부 5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나? 청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무한 성적경쟁에 폭 빠져서, 청년답게 역사를 의식하고 우리 현실을 이해하고 정의롭게 공동체가 함께 사는 공부를 하지 않으니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런 현실적인 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학생의 정치 관심과 참여율이 낮다. 효용감이 없으니 정당 당원도 적다. 사실은 정치를 소 닭 보듯이 한다. 친구들이 다 그러니 극소수 정치한다고 뛰어드는 청년들은 타락한 현실정치에서 금방 배워서 기성 정치인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배운 타협없는 무한경쟁 그대로 한 것 뿐이다. 더구나 정도를 가르쳐야 할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으로 정치기본권도 박탈 당한 채 쫓겨 뒀어놓으니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정치의 꿈은 요원한 것이다.

교육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정치와 정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유럽의 프로 축구구단들에서 배워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물론 당장 주요 포지션에서 활약할 우수한 선수를 비싼 돈을 주더라도 데려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발굴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소속감이 남다른 선수들을 확보하게 된다. 유럽의 청년정치는 꼭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성장한다. 학생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는 것이다. 여름 방학이면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캠프에서 인기 많은 현역 정치인의 강연도 듣고 대화도 하면서 꿈을 키우는 것이다. 연설 훈련도 하고 공공이 무엇인지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런 훈련을 10대부터 받으니 이들이 20대, 30대에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어도 자연스럽다. 30대, 40대에 대통령과 수상이 되어도 걱정할 일이 없다. 쌓은 경험과 실력이 있어서 혁신을 하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일이 없다. 그렇다. 우리는 학생들에 대해 정치를 담 쌓게 하고 입시 준비만 하라고 한다. 필요하면 방송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법조인, 의사, 기자나 교수 중에 골라 영입식 치르고 표 모아주고 공천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충원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화하려면 정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길러놓은 청년 인재가 없는데 어찌랴? 과연 한국에서 어느 당은 예외일까? 정당들의 경쟁적인 당헌 당규 개혁이 필요하다.

88만원세대론이 어려운 흠수저 청년들을 이미지화해서 뭉쳐보라는 우석훈, 박권일의 충고였다면, 내가 말하는 청년정치 2.0은 지방대와 서울에서도 SKY 외 대학 출신의 적극적인 청년들을 소환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투쟁 때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지금 누구인가? 청

년정치는 왜 안되는가에 대답하려는 것이다. 청년정치가 청년들이 공직선거에 출마 많이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청년들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고 미래고 어깨가 무겁다는 것이다. 그것을 자각한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부유층과 엘리트 청년 말고 80% 이상의 절대 다수인 일반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참여를 독려해 탈정치, 반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투표율이 낮았고 신자유주의의 아들로 자라 무한경쟁 속에 치여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청년들, 정치적 효용감도 낮았고 집단적 목소리도 못내다가 이준석과 박지현 등의 정치적 호명을 받고 목소리를 낸 청년들을 주목한다. 이걸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와 다르다. 공적 이익을 위한 목소리라면 대단한 변화가 아닌가? 자기 운명의 주인공으로 변화. 이게 모이면 역사발전의 기관차가 되는 것이다. 어쩌면 부모세대인 87세대처럼 하나의 강한 정치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촛불정치세대이다. 지금 그 탄생의 용트림을 하고 고고의 합성을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닐까?

과거 청년들이 투표율이 아주 낮은 시기가 있었다. 70-80년대에 대학에 다닌 세대이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까지 교련을 필수학점으로 이수하고 군사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다. 이 때는 박정희, 전두환이 총칼로 쿠데타하고 군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온갖 자리를 맡아서 그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던 시대였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투표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박정희의 10월 유신 때는 국회의원 총수의 1/3(유정회)은 박정희가 지명했다. 그러니 환멸과 자포자기에 빠져 청년들이 투표를 안한 것이다. 지금은 그러면 안된다.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청년이 정치를 해야 한다. 문제가 중첩된 한국의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치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청년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고, 20세기에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이루어낸 복지국가도 우리 아직 이루어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오만한 집권세력에 경종 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수고 없이는 결코 청년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서 청년의 밝은 미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의 정용인기자는 “왜 진보에는 이준석이 없냐?”고 했다(2023.12.9.). 그만큼 언론에서 받아써주는 청년정치인이 다른 당에는 없어서 그런가? 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준석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했다. 그가 기후위기와 성평등과 평화와 인권, 통일, 복지국가의 꿈과 정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의 페미니즘 비판이 이대남을 규합해 보수가 승리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일베 류의 사상적 정치적 수준 때문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가 2021년 국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보수의 혁신과 집권을 위해 4.3과 5.18을 얘기하고 그런 그를 국힘 당원들이 대표로 뽑았다. 이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보수정당 당원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무조건적 친미반공주의와 친일역사관을 넘어 극우를 청산하고 합리적 우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을까? 아니면 당면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일까? 진보는 사교육 만능과 특목고 정책을 비판하고 하나라도 지정 취소를 하는데 연연할 것이 아니었다. 청년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힘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을 기성세대는 반성해야 했다. 자율적이어서 할 교사들을 정치중립이란 이름으로 꼼꼼 묶어놓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길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다. 촛불과 탄핵의 힘으로 집권하여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문재인 정부 때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 시민교육을 하게 하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김대중부터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에 전면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자유주의자 대통령들의 한계를 반성해야 한다.

역시 신자유주의 선진국의 아들로 자라나 대입을 목표로 무한경쟁교육에 시달리며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청년들에게 이준석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치적 효용감도 낮고 집단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일베의 부추김을 기반에 더하여 공개적인 이준석의 정치적 호명을 받고 반응한 것이다. 이 목소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성격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준석이 움직이려 한 청년들은 이제 겨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성 청년들을 대상화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몰아갔다. 입시에서 경쟁하고 취업에서 경쟁하는 실질적 경쟁자인 여성 청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 청년들은 한국에서 사회적 영향력도 약하니 더욱 공격하기 쉬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성별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흐름이 하기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부모세대인 87세대보다 강력한 촛불정치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주행하면 새로운 균열을 만드는 부정적 힘이 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하긴 정의당조차 이제 류호정을 비례대표 1번으로 했던 결정의 후과를 4년 만에 코미디로 보았다. 정의당조차 자유주의가 판을 쳤던 결과이기도 하다. 조성주, 장혜영까지 함께 한 제3의 권력은 자유주의적 다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좌파 정당의 명줄을 잇겠다고 했던 정의당에서조차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도 아니고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다니 참 아이러니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의 부재를 정의당 내에서 들어야 한다니... 이론적으로 사민주의는 자유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그 한계를 넘은 것이 20세기 북유럽 현실 사민주의의 성과다.

스웨덴에서 정치인은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해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기부터 훈련받고 자질을 계발해 정치인이 된 사람이 아닌 각 직종에서 경력을 쌓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한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우리 나라 같이 국회의원마다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없다. 복수의 의원이 한 보좌진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 스스로 의정활동과 유권자 접촉을 위해 뛰어다닌다. 돈도 적게 주고 특혜도 거의 없다. 그래서 30대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장관이나 총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정치 경력이 15-20년 된 청년정치인 출신이다. 평생의 천직이라는 강한 신념과 훈련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다. 명예롭지만 너무 힘든 희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삶이 의미있고 인생을 걸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가능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런 청년정치인을 대망한다. 스웨덴에서는 학생 시절 방학 때면 경치 좋은 섬과 같은 곳에서 캠프를 열어 학생들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가르친다. 존경하는 현역 정치인과 대화도 한다. 대중연설과 일대 일 설득법도 배운다. 우리 현실로 말한다면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배운다. 헌신하며 살 결심이 없다면 정치는 시작하면 안된다는 것도 배운다. 물론 그 근처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시민교육이 있다. 시민의 자질과 의무에 대해서, 공과 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런 목표 실현을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정규직을 면하기 위해 공부하라는 대한민국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의 강제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좌절시켰을까 생각하면 슬프다. 이제 힘을 모아 다시 청년정치를 시작할 때다.

2. 주요 정당들의 당헌 당규 상 청년정치 관련 규정과 해석

녹색정의당은 당헌 당규가 4년 전 정의당에 비해 별 변화가 없다. 대의기구 10%는 그대로 이나 당직 10% 규정은 오히려 사라졌다. 오히려 청년의 기회는 줄어들었고, 공직후보 결정 시 가산점 등 지원은 여전히 없다. 총선 전 합당이 급히 이뤄지긴 하였으나 청년정치인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다. 제22대 총선의 녹색정의당은 대표적으로 청년정치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던 정의당 내 개혁적인 흐름은 2018년부터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청년정의당의 독자성을 어느 당보다 강조하고 비례대표에 청년을 우대하여 1,2번 두명의 여성 청년 의원을 탄생시키는 등의 모색에 나섰었다. 그러나 청년정의당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청년 정치인들의 당 방침에 대한 반대와 충돌이 잦아졌다. 특히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진보정당의 현실에서 청년들이 비례대표 선발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경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났다. 당내에서는 지역과 현장정치보다는 중앙무대에서 이미지정치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결국 2024년 들어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김창인 등의 신당 모임 참여와 이를 비판하는 지속적인 논쟁이 거듭됐고 결국 류호정 의원은 탈당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정의당 내부에 청년정치에 대한 실망 분위기를 확대시켰고, 전국위원회에서 청년정치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전혀 적극적으로 거론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헌 당규에 청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선 청년에 대한 무배려로 귀결된 셈이다. 전통적인 노동 중심 진보정당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의당의 청년정치 실험은 제22대 총선에서 실패로 드러났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²⁾

국힘은 2024년 당헌 당규에서 각종 대의기구 구성 시 청년 참여가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4년 전 포괄적으로 20% 포함한다고 했던 당헌 규정이 전당대회 대의원, 일반 당원 선거인,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등에 청년 참가를 세밀히 규정했다. 청년의 정치적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다. 공직후보 결정에는 우선추천지역 선정과 함께 제21대 총선 때에도 지방선거에만 경선시 20% 가산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당헌 개정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로소 민주당과 같은 총선 시 연령별 가산점을 만들었다. 청년 후보, 정치신인, 혹은 여성·장애인·탈북민, 다문화가정 출신 등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10%까지 가산점이 부여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신인여부에 따라 최대 20%(비신인 15%)가, 만 35세 이상 44세 이하 후보의 경우 최대 15%(비신인 10%)까지 가산점으로 주었다. 만

2) 이 경험은 청년정치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청년의 왕성한 비판정신을 어떻게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고교 시절부터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교육이 없고, 학교에서 시민교육도 없다. 학생 때부터 생활 속 토론과 관계맺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 중심의 교육 풍토와 대학 서열화 사회는 전면적인 교육 개혁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45세 이상 59세 이하의 정치신인도 최대 7%의 가산을 받았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과 나이 무관 중증 장애인·탈북민·다문화·유공자·공익제보자·사무처당직자·의원보좌관들은 최대 10%(비신인 5%)를, 만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최대 7%(비신인 4%)를 가산점으로 받았다. 가산점의 경우 중복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프리티안 2024.1.16.한예섭 기자). 그와 함께 제22대 총선에서는 공관위가 현역 의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해,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30%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20%를 적용해 감산했다.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경우 득표율에서 15%를 감했다(한국일보 2024.01.16. 손영하 기자).

민주당은 당헌 12장 5절 99조에 규정한 연령별 가산점 체계가 제21대에 이어 제22대 총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정치신인 10-20% 가산도 그대로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시 20대 후보 30% 가산점은 사라졌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지방의원 한명 추천, 국회의원 후보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청년 할당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175석 당선에 청년 당선자가 9명이었고 전체로 봐도 300명 중에 청년은 17명 뿐이다. 후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에 총선 때 10% 규정을 두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2023년 5월 8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특별당규(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가결시켜 총선 공천 룰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연합뉴스 2023.5.8. 정윤주기자/ 폴리뉴스 2024.1.29. 김승훈기자). 당헌 당규에 따라 볼 때도 민주당은 청년후보자에 대해 같은 자리에 두번 이상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많은 혜택이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었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청년 후보자도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가산해준다. 또 청년후보자는 나이에 따라 만 29세 이하는 25%를, 만 30세 이상 만 35세 이하는 20%를, 만 36세 이상 만 42세까지는 15%를, 만 43세 이상 만 45세까지는 10%를 획득한 득표수에 가산해준다(민주당 당헌 12장5절99조). 현역의원에 대한 당무조사 결과 경선 시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 득표율의 20%, 최하위 10%에 포함되면 30%가 감산되도록 했다(폴리뉴스 2024.01.29. 김승훈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청년 가산점이 공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공천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무관하게 현역의원 공천 교체율이 높았던 민주당에서 현재의 당헌 당규가 청년 정치인의 후보 공천에 상당히 공격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21대 때 청년 후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약했던 국힘에서도 제22대 때는 연령에 따른 청년과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해 청년 정치인을 지원했다. 그 결과 청년 당선자는 제21대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한명에서 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준석 등 국힘의 청년 정치인 상당수가 탈당했음에도 그렇다는 것이다.

〈표 1〉주요 정당 별 청년 관련 당헌 당규 조항(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청년 연령 규정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	만 45세 미만
당직과 공직 후보 결정 시 청년 관련 조항	당직과 대의기구 구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대의기구 구성에 청년 당원 10% 이상 포함(당헌2장9조) - 대표단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로 구성(5장1절 25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당헌2장9조) - 전국대의원대회에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학생 대의원 참가(3장1절15조23),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중 청년당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당헌3장1절15조26④). - 중앙위원회에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추천(당헌3장1절19조22) -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직능대표자회의(20명)노동위원회(40명), 최고위원회의 의결(20명)의 중앙위원에 청년 권리당원을 10% 이상 포함(당헌3장1절19조27⑦) - 청년미래연석회의는 20인 중 청년이 50%이상으로 구성(중앙조직규정4절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대회 대의원 중 20-40%는 청년당원으로 구성(당헌 3장1절12조) - 일반당원선거인 중 청년을 구,시는 30%, 군은 20% 포함(당대표,최고위원 선출규정 2장8조4) - 전국위원회에 청년전국위원 19인 이내, 대학생상임전국위원 2인 참가(전국위 규정 2조23,24) - 상임전국위에 청년3인,대학생2인 참여(상임전국위 규정2조)
	공직 후보 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선에 참여한 청년후보자(만 45세 이하)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가산. 1. 해당 선거구에서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청년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여성·청년·장애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당헌7장86조). -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p>득표수의 10%를 가산.</p> <p>3. 청년후보자는 만 29세 이하는 25%, 만 30세 이상 만 35세 이하는 20%, 만 36세 이상 만 42세까지는 15%, 만 43세 이상 만 45세까지는 10%를 가산(당헌12장5절99조)</p> <p>-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20% 가산. 그러나 이전 각급 선거에서 당적 불문 후보등록한 자(비례 후보자로 낙선한 자 제외), 경선 출마자나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가산점 없음(당헌12장5절99조).</p> <p>- 공천관리위원회는 청년은 10-25% 가산하고 정치신인은 10-20% 가산한다(공직선거후보추천위 규정 4장34조). 국민참여경선이나 당원경선 때에 청년당원이 1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공직선거후보추천위 규정 5장40,42조)</p>	<p>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얻은 득표수의 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지선후보추천규정5장26조)</p>

*국힘 당헌은 23.11.23 개정, 민주당 당헌은 23.12.7 개정, 녹색정의당 당헌은 24.1.25 개정한 것임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국대학생위원회나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는 전원 청년으로 구성되어 인용 안함

*어느 당이건 지역 당조직 규정에는 청년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음. 운영위, 상무위에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이 포함되는 정도임

박 현 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 청년의 정치참여와 청년 정치인의 확대는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는 것과 청년들의 정치적 선호가 대표되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정치참여는 두 분의 발표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보아 (1) 청년 정치인의 확대, (2) 청년 정치 활동가의 확대, (3) 청년들의 투표참여 확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여성 대통령의 등장이 양성평등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듯이 청년 정치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들의 선호가 대표되는 것은 아님.
- 위의 세 가지 참여방식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저변에서의 투표참여부터 확대될 때 청년들의 선호가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청년 정치인의 비중 확대가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기존의 정치인들도 청년들의 선호를 대표할 유인이 생김.
- 청년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발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함.
- 2020년에 유권자들의 청년정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응답자들은 현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연령이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젊은 연령대 중에서도 40대 국회의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5.5%를 차지한 반면, 30대는 23%, 20대는 4.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음.
- 응답자를 연령대 별로 구분해 보면 40대 미만의 경우는 2,30대가 국회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많았고, 4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2,30대를 선택한 비율이 낮았음.
- 유권자들에게 연령대가 아닌 계층별로 어느 집단이 국회에 더 진출할 필요가 있는지도 질문해 보았는데 청년을 선택한 응답자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거주자와 여성이 뒤를 이었음.

- 각급 선거에서 실제로 청년후보에게 투표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이유를 묻자 다수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경고”, “인구구성에 비해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자질이 우수하다거나 청년 후보자가 지역 현안을 잘 챙긴다고 답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 청년 후보자에게 투표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들 중 다수는 “청년 후보자가 없다”고 대답했고, 뒤이어 “나이와 무관하게 가장 우수한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수였음.
- 보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압도적 다수인 518명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경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197명이 “인구구성에 비해 청년 국회의원이 소수”라고 대답했음.
- 유권자들은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청년 정치인들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더라도 기성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대안으로 선택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더라도 청년들의 선호가 효과적으로 대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 청년 정치인 양성방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청년공천할당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었지만 기존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추가적 자원 투입에 대해서는 지지가 낮았음.
-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1) 청년 정치지망생들이 유권자들과 만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2)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를 경험하고 능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이 정 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청년 왜 중요한가?

- 청년은 여성,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치 약자
-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4.7%, 지방의회의원의 7.7%(광역), 11.1%(기초)에 불과함
- 청년 여성의 경우 정치 자금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장 취약

● 누가 청년인가?

- 사회적, 법률적으로 일관된 정의가 없음
- 청년기본법: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를 청년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등 주요 정당의 청년 당원 기준: 45세 이하
- 다수 국민들은 청년을 20~30대로 인식

〈표 1〉 청년 정치인의 연령에 대한 유권자 인식

단위: (명), %

	사례수 (명)	30세 미만	35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계
	(1,000)	9.5	40.3	39.0	11.2	100.0
성별						
남자	(498)	11.1	36.9	40.5	11.6	100.0
여자	(502)	7.9	43.8	37.5	10.8	100.0
연령						
18-29세	(176)	18.0	60.8	20.1	1.2	100.0
30-39세	(152)	10.2	38.3	46.4	5.1	100.0
40-49세	(185)	10.0	26.1	47.4	16.4	100.0
50-59세	(194)	6.6	42.2	40.2	11.0	100.0
60세이상	(293)	5.6	36.9	40.5	17.1	100.0

출처: 2021 한국리서치 20차 정기조사(10월 2주), 청년의 정치참여 조사(CSID).

• 청년의 정치참여 필요한가? 바람직한가?

• IPU 청년정치참여 보고서

- 2014년부터 각국 의회의 청년의원비율 등 청년의 정치대표성 관련 보고서 발간
- 청년(30세 미만)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의회에서는 2%에 불과
- 공정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위해 청년의 의회진출이 확대되어야

• 정치대표성과 세대 불평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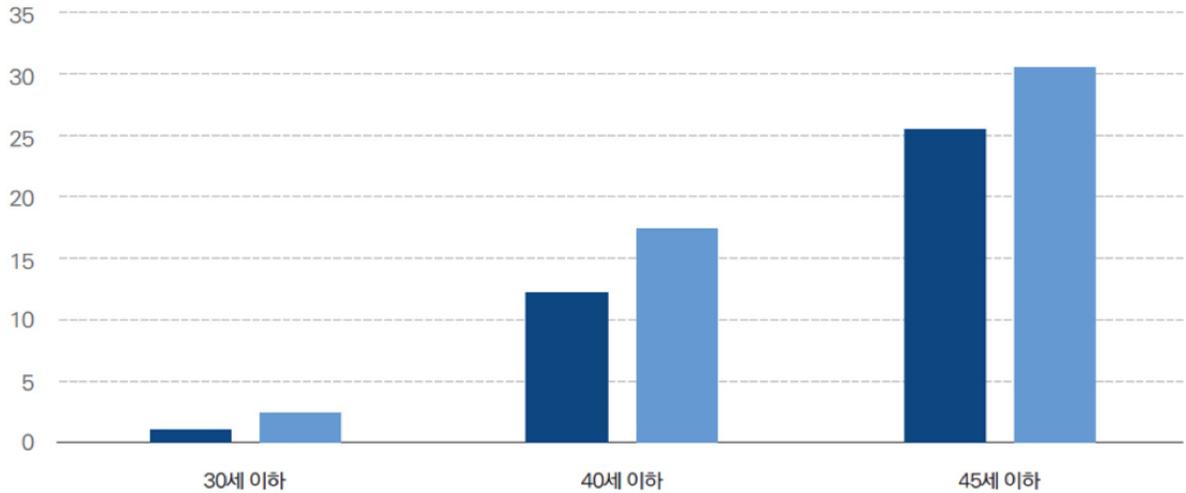
- 인구 대비 낮은 대표성
- 공정성의 문제, 세대간 불평등 심화
- 기후, 식량, 환경 등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층의 참여가 필요

• 개선과제 1 : 선거제도 개선

1) 비례대표 비중 확대

- 현행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지역구 선거가 전체 선거의 80% 이상을 차지함(국회의원선거는 전체 300석 중 254석(84.7%),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전체 의석의 90%를 지역구 선거가 차지함)
- 명부작성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비례대표제와 달리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는 조직, 정치자금의 동원 능력, 인지도 등 선거 경쟁력이 강조됨
- 실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다수제에 비해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의 청년의원 비율이 높음

〈그림 1〉 선거제도에 따른 청년의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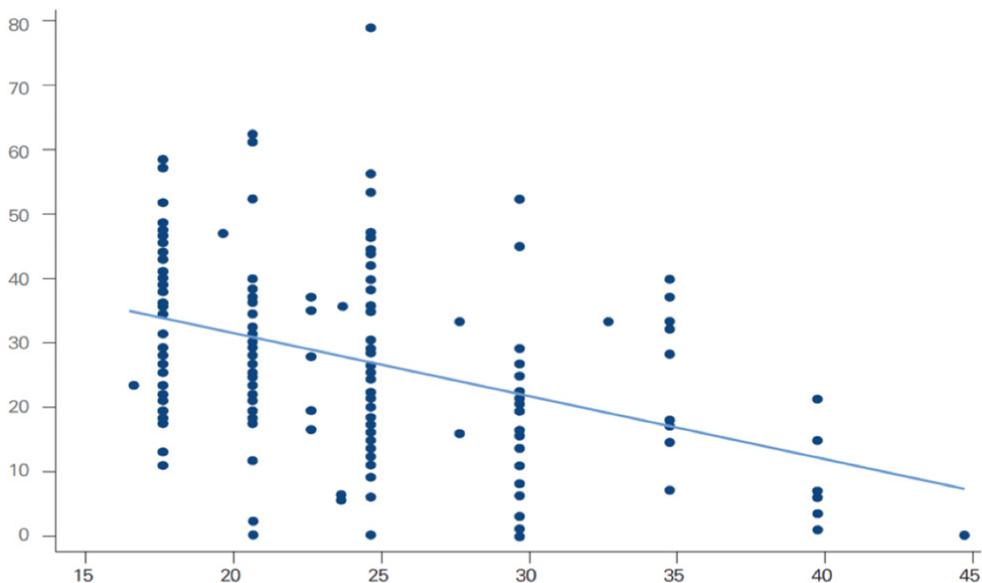


주: 1) 진한 파란색은 다수제를 택한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이고 옅은 파란색은 비례제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임
 2) 위의 그래프는 각각의 연령대에 속하는 의원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45세 이하 범주에는 30세 이하 및 40세 이하 의원도 포함된 수치임
 3) 상원과 하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2018』, 2018, p.23, Figure14.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완화

- 선거권, 피선거권이 낮을수록 청년 대표성이 높아짐

〈그림 2〉 피선거권 연령과 45세 미만 의원 비율



주: 가로축은 피선거권 연령, 세로축은 45세 미만 의원 비율임
 자료: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2018』, 2018, p.24, Figure 15.

- 선거권은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2020.1.14.)되었으며,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됨(2022.1.18.)

3) 선거 기탁금 기준 완화 및 보조금 제도개선

- 29세 이하 후보자의 기탁금 50% 감면, 30~39세는 30% 감면(2022.4.20.)
- 39세 이하 후보자의 경우 선거 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득표기준 하향 조정
-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제 신설: 총선과 지방의회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 추천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2022.2.22.)
-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4) 청년 할당제 도입?

- 지역구선거혹은 비례대표선거에 청년 할당제 도입 검토
- 여성할당제와 연계 가능(청년 여성 추천)

〈표 2〉 청년할당제 적용 국가

국가	유형	청년할당적용대상	할당(%)	30세미만의원(%)	40세미만 의원(%)
르완다	의석수	35세 미만	7.7	1.3	22.5
모로코	의석수	40세 미만	7.6	1.6	14.7
케냐(상원) ¹⁾	의석수	35세 미만	2.9	3.0	26.9
우간다	의석수	30세 미만	1.3	1.1	22.9
필리핀 ²⁾	공천할당	비공개	50 [*]	1.7	15.8
튀니지	공천할당	35세 미만	25	6.5	22.6
가봉	공천할당	40세 미만	20	0	8.6
키르기스스탄	공천할당	36세 미만	15	4.2	35.0
이집트 ³⁾	공천할당	35세 미만		1.0	11.8
니카라과 ⁴⁾	정당자율	비공개	40/15	1.1	14.1
루마니아	정당자율	비공개	30	6.4	35.3
멕시코	정당자율	30세 미만	30/20	7.6	35.7
베트남	정당자율	40세 미만	26.5	1.8	12.3
스웨덴	정당자율	35세 미만	25	12.3	34.1
키프로스 ⁴⁾	정당자율	35세/45세	20	1.8	12.5
헝가리	정당자율	비공개	20	2.0	29.4
세네갈	정당자율	비공개	20	0	11.0
크로아티아	정당자율	비공개	비공개	2.7	21.9
우크라이나	정당자율	비공개	비공개	5.0	41.2

주: 1) 케냐의 경우 하원도 할당규정이 있으나 청년의원 비율 자료는 없음
 2) 필리핀은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과 청년을 묶어서 50% 할당제를 실시함

● 개선과제 II: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 확대
- 청년 대상 정치 교육 확대 및 청년 정치인 발굴과 공천을 위한 정당의 노력 필요
-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청소년기 부터 정당 활동 참여를 통해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정당의 청년 조직을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

● **개선과제Ⅲ: 청년 대상의 정치교육 확대**

-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함
- 선거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당 및 공공기관을 통한 정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 정당별로 대변인 아카데미, 여성정치 아카데미, 정치학교, 청년정치캠퍼스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
- 해외사례를 보면 인턴십 프로그램(미국), 예비 정치인 교육 프로그램(영국), 정치재단을 통한 교육(독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교육을 실시함
-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률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제도 마련 (국가기관에 의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함)

● **유권자는 청년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인식함**

〈표 3〉 청년 의원의 확대 필요성

	사례수 (명)	청년 인구에 비해 청년의원이 적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	청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청년 의원을 확대해야 한다.
■ 전체 ■	(1,000)	63.7%	76.8%
성별			
남자	(498)	60.9	72.0
여자	(502)	66.4	81.5
연령			
18-29세	(176)	69.8	84.5
30-39세	(152)	66.9	77.8
40-49세	(185)	62.1	72.0
50-59세	(194)	65.1	76.9
60세이상	(293)	58.3	74.5

출처: 2021 한국리서치 20차 정기조사(10월 2주), 청년의 정치참여 조사(CSID).

〈표 4〉 유권자가 선호하는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

	사례수 (명)	정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 및 공천 확대	청소년의 당원 가입 및 정치 참여 허용	국회와 지방의 회에 청년 할 당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 전체 ▣	(1,000)	74.6%	58.7%	56.5%	48.4%	48.4%
성별						
남자	(498)	73.7	59.1	49.1	51.1	40.5
여자	(502)	75.4	58.3	63.7	45.8	56.2
연령						
18-29세	(176)	80.1	60.3	61.8	54.5	63.0
30-39세	(152)	75.2	61.1	55.6	54.5	55.9
40-49세	(185)	70.7	56.1	56.3	53.9	52.3
50-59세	(194)	76.9	64.8	55.3	44.9	44.5
60세이상	(293)	71.8	54.2	54.6	40.5	35.8

출처: 2021 한국리서치 20차 정기조사(10월 2주), 청년의 정치참여 조사(CSID).

박 혜 민 뉴웨이즈 대표

1. 인재 여정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 필요

● 현황

- 인재 성장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전무해 정당 내에서 성장하기 어려움
- 정당 밖에는 강연과 토론 위주의 정치 교육으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한계 존재
- 정치라는 전문성 자체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없고 폐쇄적인 암묵지로 공유되면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적음
- 실제 책임과 권한을 갖거나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프로그램 내에서의 성장 경험이 반복됨

● 방향

- 고객 여정 맵(Customer Journey Map)처럼 인재 여정을 그리고 정당 안팎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 필요
- 정치 안에서의 전문성을 체계화된 정보로 정리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자기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체화해 지역과 의제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경험을 쌓으며 지지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나갈 수 있어야 함
- 초당적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 구성 필요
- 유권자와 단절되지 않은 성장 경험을 통해 정치인의 성장과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을 연결

	가입	관심	탐색	활동	도전	출마	성장
상황		정치를 일로 하면 어떨까?	선출직 정치인은 어떻게 준비하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지?	출마하려면 어떻게 하지?	선거운동 어떻게 하지?	
행동		검색한다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	검색하거나 물어본다	시행착오를 겪는다	
어려움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지역/정당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이 적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	돈, 기회, 자원, 네트워크 모두 부족하다	
	당원 교육	인재 성장 시스템		당 내 조직 활동	출마 지원		당직 활동

2.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제도적 한계 파악 및 개선

● 현황

- 젊치인 등장에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진단이 반복됨
- 할당제나 가산점과 같은 솔루션 중심 논의는 찬반 중심의 논쟁으로 소모됨

● 방향

- 생애주기적인 통합적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법률/제도/문화적 한계를 정리하고 우선 순위 및 개선점 도출 필요
- 정당 가입, 당원 교육 및 성장 시스템, 일상적인 정치/정당 활동, 공천 기회 확대, 출마 지원 등 생애주기적인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방안 도출 필요
- 기존에 운영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청년할당제, 지역구 의무 공천제 등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효과적 운영 필요

현 지 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이 자리에는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계신다. 그러한 전문가들에 비해 나는 정치 현실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모자랄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유는 기존 연구나 기성 세대의 관점이 청년의 관점과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토론의 세 질문에 대하여 지극히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 한다.

1.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국회도 나름대로 청년 정치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공직 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도입해서 정당이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청년정치발전비를 주로 사무직 당직자 인건비와 일회성 행사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청년정치발전비의 도입 의도를 고려한다면 부적절한 지출일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청년정치발전비 중 99.3%를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로만 사용하여, 청년정치발전비가 정작 청년 정치인이나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과 거의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것도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는 어떠한가? 민주당의 경우 당규에 청년 10% 공천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 20·30세대 지역구 공천자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한국 정치에서 후보의 당선 여부는 개인의 영향력보다는 정당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피선거권 연령을 어디까지 낮추던지와 무관하게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 한 청년이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기성 정치는 청년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뉴스가 될 만한 어떤 이슈에도 청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반성도 없다. 이러한 기성 정치가 청년 정치를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기성 정치인이 청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입장에서 기성 세대가 청년을 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말은 대충 둘러댄 조잡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당연히 청년 정치 참여의 저해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써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기회비용’과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 청년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정치 경력이 자신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에 있어 총학생회장 선거는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쟁하기는커녕, 1명의 후보만 출마하거나 그마저도 투표율 미달로 낙선하곤 한다. 국회의원보다 당선 확률도 높고, 정치 효능감도 더 높을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부분의 학생이 출마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이다. 총학생회장을 한다면 수많은 고생을 하는 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미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는 어떠한가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 국회의원은 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선거비용은 아무리 재정적 도움을 받더라도 일반인이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다. 물론 당선이 된다면 보전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면 보전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설사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국회의원 경력은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은 대단히 적다. 심지어 국회의원은 업무 강도는 강하고, 직업 안정성도 낮으며, 스트레스도 높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을 하는 분은 정말 간절하게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값싼 명예욕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청년은 국회의원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지극히 많다. 대부분의 청년은 국회의원선거일자리와 살 곳조차 찾는 것도 힘들어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에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청년에게 국회의원이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또한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도 청년의 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크게 제약한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각 분야의 할 것 할 만큼 하신 분들이 가는 자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그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모르겠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서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변호사 따고서 활동하다가 유명해진 후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가 싶다. 지금의 정치 현실은 양반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국회의원과 국민으로 대체되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3.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너무도 당연하다. 정치 전반에 있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청년의 투표율이 높은 것도 장기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년이 투표할 이유가 거의 없다. 청년을 위한 정책도 없고, 청년 정치인도 없는데 도대체 기성 정치에 어떤 면에 청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성 정치는 청년에게 관심이 없으며 기성 정치가 청년을 매료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기에 청년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인지 모르겠다.

청년의 투표율은 장기간에 걸쳐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2030이 성장하여 4050이 되면 오히려 투표율이 증가한다. 2030이 4050이 되면서 투표 독려 캠페인이 감명 깊었다거나 정치학 수업을 추가로 수강한다거나 해서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당의 정책이 주로 4050을 타겟으로 하기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정당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년 유권자가 정치적인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청년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유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